이덕일의 '역사의 창'

'유사 역사학'이란 용어

조선총독부는 종교를 두 종류로 분류했다. 기독교·천주교·불교 등은 종교로 분류해서 총독부 학무국에서 관장했다. 학무국은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문화부 등이다. 천도교·동학교·단군교·대종교·보천교·증산교 등은 '유사 종교'로 분류해 독립운동가를 취체(取締: 단속)해서 고문하던 총독부 경무국에서 관장했다.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민족 종교를 '유사 종교'로 명명해서 독립운동 단체로 취급하고 처벌했다. 조선총독부는 특히 동학, 곧 천도교가 항일 민족운동에 나설 것을 우려해서 그 동향을 철저히 감시했다. 1918년에 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유사 종교'(朝鮮の類似宗教)는 동학계열의 교도 숫자를 남자 8만 8772명, 여자 6만 156명 등 모두 14만 8228명에 달한다고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동학을 특별 감시했음에도 이듬해 천도교의 주도로 3·1혁명이 일어나자 더욱 민족 종교 탄압에 열을 올렸다. 1925년 발간한 '조선의 유사 종교'는 위의 민족 종교 외에 미륵불교, 불법연구회 등도 '유사 종교'로 분류했다. '불교'의 외피를 입은 민족해방운동 단체로 본다는 뜻이었다.

1926년 4월 조선총독부는 순종이 세상을 떠날 경우를 대비해서 각 경찰당국에 정보 수집을 지시하는데, '요시찰인 및 요주의 인물의 동정'과 함께 '사상 단체 및 유사 종교 단체'가 들어가 있다. 사회주의 계열의 사상 단체와 함께 민족 종교 단체가 주요한 단속 대상이었다. 민족 종교 교도들은 그 자체로 일제의 집중적인 취체 대상이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 따르면 1932년 경북의 호구조사 규정의 시행 세칙을 제시하는데, '요시찰인, 요주의인' 등을 특별히 주의하게 하면서 유사 종교(단체)를 믿는 자도 우측 상부에 따로 이름을 기재해서 감시하게 했다.

'동아일보' 1938년 6월 17일자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사상 취체의 방침을 세웠는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적으로 온당치 못할 때는 작위(作爲: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 부작위(不作爲: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행위)를 막론하고 취체하기로 하고 세 가지 방침을 정했다. 첫째, 유사 종교의 취체는 물론 기독교·불교·유교 등을 순전히 일본화시키는데 주력하고 둘째, 문화면에 있어 민족적 색채가 있는 것은 엄중히 탄압 지도할 것이고 셋째, 인민전선계통(人民戰線系統)의 기운(氣運)이 있다든지 또는 사상적으로 타국과 연락의 혐의가 있다면 단호한 처치와 지도를 가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인민전선계통은 코민테른, 곧 제3 국제공산당 계열을 뜻하는데, 이보다 먼저 취체 대상으로 꼽은 것이 민족 종교였다.

그래서 대일 항전기에는 민족 종교인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았다. 1038년 11월에는 임일봉(林一奉) 등의 태극교도 들이 대대적으로 체포되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형법이 보안법과 육군 형법이었다. 1939년 8월 보천교에서 분파된 선도교 교주 김중섭 등 10여 명은 지하운동을 한 혐의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3년 형을 받았다. 1940년에는 제주도의 보천교 계열 무극대도 교주 강승태를 비롯한 20여 명의 교인들이 일왕에 대한 불경죄, 보안법, 육·해군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6년에서 10월까지의 형을 선고받는데, 11명이 징역 2년 6월 이상의 중형이었다. 천황제 및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을 예언하고 민족의 독립을 희구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의 대학 강단과 역사 관련 국가 단체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출신의 이병도, 신석호의 제자 군단으로 형성된 이른바 강단 사학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식민 사학, 곧 총독부 역사관을 정설로 유지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려는 민족 사학을 '유사 역사학'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조선총독부에서 민족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유사 종교' 논리를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이들이 역사학계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극이다. 이 갈라파고스 식민 사학을 청산해야 이 나라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온전한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社說

선거 코앞 자중지란 민주당, 부끄럽지 않은가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민심의 지지를 견인할 만한 동력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지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내용을 놓고 지도부 간 자중지란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유세 현장을 다니면 '민주당이 왜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책이 많았다"며 "정말 면목이 없다. 많이 잘못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들에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시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꾸겠다.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의 이날 회견 내용은 민주당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국민을 향해 읍소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광역단체장 여덟 곳 사수'라는 민주당의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어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도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 용퇴론을 제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박 위원장의 태도를 집중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날 박 위원장의 사과와 쇄신 다짐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이를 '내부 총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텃밭인 호남 지역 후보 공천에서도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 되레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 경선으로 후폭풍을 불렀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내 쇄신 요구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성찰을 통해 타개책을 마련하고, 원팀으로 뭉쳐 지지자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시도 출산 지원금 경쟁 '제로섬 게임' 되지 않게

광주시와 전남도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불을 당긴 곳은 광주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출생 축하금 100만 원과 24개월까지 육아 수당으로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신생아 한 명에게 2년간 58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근 시군의 산모들을 광주로 유인하는 '빨대 효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8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9.3%(682명) 늘어 세종시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 증가 자치단체로 기록됐다. 반면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 수는 8400여 명으로 1년 사이 13.7%나 감소했다. 특히 나주·담양·화순·함평 등 광주 인근 여섯 개 시군의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21.4%나 감소했다. 이는 나머지 16개 시군의 출생아 감소율 9.8%의 두 배를 넘어 광주시 출산 지원금의 빨대 효과가 인근 시군에 더 큰 타격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가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5년간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맞불을 놓으면서 출산 지원금 경쟁이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출산 지원금 정책 도입의 근거로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고 있다.

전남도의 출산 지원금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252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전남도가 40%를 지원하고 시군이 60%를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기대만큼 출산율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이전에도 전남 시군들이 수천만 원의 출산 지원금으로 인구 유입을 꾀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지원금 확대 경쟁보다는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산모들이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위암의 예방과 관리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 환자가 많은 곳에서는 40세 이후부터 2년마다 위장 조영 검사나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 위내시경에서 위암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소견이 나타나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데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궤양, 선종성 용종 등이 대표적이다. 위암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위암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식습관·환경이나 유전적·문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부적인 유발 인자로는 헬리코박터균, 흡연, 술, 가족력, 짠 음식 등이 꼽힌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위산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나선형 세균 헬리코박터균을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분류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위암 발생에 독립적으로 관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여러 대규모 역학 연구들에서 헬리코박터균 감염률이 높은 나라에서 위암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위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3.8배 증가시킨다.

위암은 흡연과도 관련이 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병 위험도가 세 배 정도 높다. 우리나라에서 남녀간 식생활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남자의 위암 발생이 여자의 두 배 가까운 것은 남성의 흡연율이 여성보다 높다는 사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외에도 음주 등 다른 환경적 요인이 있지만, 담배는 가장 잘 알려진 발암 원인이다.

술은 간에 영향을 많이 준다. 다량의 음주를 할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을 두 배 가량 증가시킨다.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만성 위염을 유발시켜 최종적으로 위암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음주를 하더라도 소량을 시간을 두고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모든 질환이나 암이 그렇듯이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경우 위암 발생률이 두 배로 증가한다.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가족의 생활 환경이나 식생활·식습관 내용이 비슷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도가 4.5배 더 높다. 질산염 화합물(가공된 햄, 소시지류 등 가공 보관 식품), 탄 음식, 염장 식품들도 위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지나친 염분은 위 점막을 자극하기 쉽고, 자극과 손상이 지속되면서 위암이 발생하기 쉽게 된다. 매운 음식도 위산을 다량 분비하게 해서 위에 자극을 주고 위염과 위궤양 등을 유발한다.

위암의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술로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하고, 위 주위의 광범위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후 위장관 재건술을 한다. 수술은 병변의 위치와 침윤 정도에 따라 위아전절제술(3분의 2 절제), 위전절제술 및 합병 절제와 함께 위 주위의 광범위한 림프절 절제술을 함께 시행한다.

일부 국한성 표재성 위암에 대해서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이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 시도되고 있다. 여러 메타 분석에서 보조 항암 화학요법이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암의 근치적 수술 후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수술 전 방사선 치료는 국소적으로 시행하는 위암의 근치 절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술 전에 시행한다. 또한 위암의 근치 수술 후 보조 요법으로 항암 화학, 방사선 병용 요법이 고려될 수 있다.

40세부터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은 위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암 환자들이 대부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기에 위내시경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기에 진단하거나 예방한다면 치료가 매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위축성 위염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있을 때에도 2년이 아닌 1년에 한 차례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

식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 수칙이다. 훈제 식품을 적게 먹고, 태운 육류나 생선 등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소금에 절인 식품, 짠 음식은 피해야 한다. 방부제나 식용 색소가 적게 든 음식물을 선택해야 하며, 딱딱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삼가고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6·1 선거공감 기고 〈7〉

우리가 뽑는 것은 사람입니다

김성찬
(주)디노랩스 대표이사

"인터넷 때문에 편지가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두루넷은 인터넷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짜 인터넷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최초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두루넷)의 추억 속 광고 문구처럼 인터넷은 그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적어도 선거에서 만큼은 아닌 듯하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SNS, 문자, 각종 인터넷 언론에는 과열 경쟁으로 인해 선거 홍보물로 가득하다. 장장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초고속 인터넷의 나라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넘치는 정보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여론조사 지지율 발표로 사람인 후보자가 숫자에 가려진다. 마치 민심은 쏟아진 데이터와 정보 속에 있는 듯하다. 물론 득표수로 당락이 결정되기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유권자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반복되는 홍보물과 지지율보다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

필자는 인공지능 IT 기업에서 온라인 웹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은 사람과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온라인은 현실 세계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현실 세계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 또한 결코 데이터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인지 숫자만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온라인과 디지털, 수치로 표현되는 지금의 선거 양상은 후보자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과 정량적인 판단을 동시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권자의 판단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선거에서 숫자를 뺀다면, 정성적인 측면은 네거티브와 같은 구태 선거만이 남는다. 그리고 이러한 네거티브는 온라인상에 데이터로 남아 지금의 유권자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부끄러움이 된다.

네거티브 선거만큼은 남은 선거 기간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이후에 남을 것은 갈등과 분열뿐일 것이다. 이는 선거 운동의 핵심을 정책 선거에 두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은 어떻게 정책을 소개할 것인가. 먼저 경쟁 구도 자체가 정책으로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후보들이 앞으로도 정책 경쟁을 통한 선의의 대결로써, 유권자들에게 정책으로 구애하는 선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한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공약을 알리고 노출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스마트해진 유권자들과 사회적 환경을 이용하는 '스마트한 세대'에게 익숙한 선거 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의 선거처럼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대면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람은 온라인과 숫자(데이터)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후보와 유권자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한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거의 결과가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더하는 정보와 데이터가 아니라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

無等鼓

구도심 공공투자

모든 도시에는 수변공간, 즉 하천이나 호수가 있다. 도시에서 물은 그 자체로 안정감을 주고, 산책길·운동기구·의자·나무·잔디·작은 광장 등과 어울리며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자극한다. 깨끗한 수질, 넓은 오픈 스페이스, 높은 접근성 등은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작은 기쁨을 선사한다.

광주에는 광주천이 있다. 광주천은 원래 '구곡양장'(九曲羊腸)으로 그 폭은 100m가 넘었다. 다만 우기에는 장마 피해가 심했고, 건기에는 바닥을 보일 만큼 말랐다고 한다. 광주천에는 오래 전 형성된 큰 장, 작은 장이 열리고 그 주변에는 상인이나 짐꾼 등이 거주했다. 조선시대 광주에 사는 주민들이 모두 모여 줄다리기 등 축제를 열었고, 물도 깨끗해 여름이면 멱을 감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일제와 일본인들은 이 광주천을 개발하기로 했다. 구불구불한 물길을 반듯하게 한 뒤 양측에 남은 공유지를 분양해 돈을 벌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의 공간이었던 광주천변을 공장, 근대식 시장, 주거지, 농경지 등으로 개발해 팔아치웠다. 또 한 가지, 예산을 적게 쓰면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광주천을 하수종착지로 삼았다. 도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물은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면서 광주천은 기피 공간이 돼 버렸다.

해방 이후 도심 인구는 계속 늘었고 그럴수록 광주천은 시민들로부터 더 멀어졌다. 급증하는 인구와 자동차를 감당하기 위해 서방천, 동계천 등 도심 하천을 매립해 나갔고, 일제가 절반을 주거지로 개발한 경양방죽의 나머지도 메웠다. 결국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은 사라지고 냄새나는 하수구만 남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광주천의 수질 개선, 경관 향상, 생태 복원 등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였지만, 냄새는 그대로다. 빗물과 하수를 분리해 하수를 별도로 처리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과거 무분별한 도심 개발 과정에서 사라진 것들을 다시 되살려 줘야 한다. 광주천의 냄새를 완전히 지우고, 복개된 하천에 제 모습을 찾아 주며, 작은 공원이나 광장·놀이터 등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 도심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가 도시재생의 시작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